

軍事施設 保護區域 解除에 관한 建議 案

議案 番號	133
----------	-----

發議日字：1992. 6. 30.

發議者：송석찬 외 6인

1. 主 文

대전직할시 유성구 신성동 일대 시설중인 210만평의 자운지구 군사시설을 중단 시키고 과다하게 설정된 신성동 탄동 일대 861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도시계획을 변경 해제 건의 하고자 함.

2. 提 案 理 由

가. 군사시설이 전혀 되지 있지 않고 군작전 하고 아무런 관련 없던 자운지구 신성동 탄동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지 군사시설 보존구역 지정

나. 1천여 세대 5천여 주민이 주택지도 조성하지 않은채 강제 이주 대부분 도시빈민으로 전락

다. 토지매입후 5년이 넘도록 아무런 개발을 하지 않다가 이주민이 환매 요구하자 군부대 시설을 하나 대부분 넓은토지가 잡초만이 우거진채 10년 가까이 방치

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불구, 넓은 면적의 토지 방치함은 누군가 책임지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9조2항과 토지 수용법 제 71조 제2항에 의거 환매 요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동의안

위 치 : 620사업지구 (자운지구)
구역 면적 : 861만평

발의 : 송 석 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신성동일대에 시설중인 210만평의 자운지구 군사시설을 중단시키고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정된 신성동, 탄동 일대 861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해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비슷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시는 88.7%라는 면적이 자연녹지로 지정 되어있습니다만 대전시 전체 면적의 5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순수 자연 녹지는 29.7%에 불과하며, 순수 자연녹지라 할지라도 대덕 연구 단지 부지 조성 지역 834만평, 군사시설 보존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과학 산업 단지, 공업단지, 임야 및 공원 용지등을 제외하면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는 얼마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개발입지 여건속에 있는 대전시의 토지를 군사시설 보호내지 보존지역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하루 빨리 시정시켜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동서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공산 중주국인 소련이 지도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무력에 의한 군사 대결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중요한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한다는 목적 아래 1972년 12월 26일 군사시설 보호법을 제정하여 많은 지역을 도시계획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설정은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군사 시설 최외곽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지구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제18조에 의거 시설물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유신독재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1975년 1월 22일 군사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군작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자운지구 신성동일대 710만평을 비롯하여 국방 과학연구소 탄동 일대 151만평등 861만평을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군사 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는가 하면, 반석동 일대 368만평을 군사 보존구역으로 설정하여 1천 2백 2십 7만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지 군사시설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후 9년이 지난 1983년 12월 16일 당국은 용산미군기지를 이전시킬 계획아래 소위 620사업이라하여 자운지구 2백 6만 7천평의 토지를 비롯하여 반석동 일대 토지를 평당 1만 3천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1천여 세대의 이주민들에게 이주 택지도 조성해 주지 않은 채 5천여 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여 내쫓아 오늘날 그 지역에서 나온 주민 대부분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되어 한 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공권력을 남용하여 광활한 면적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후 620사업이라고 하는 거창한 구호아래 헐값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5년이 넘도록 아무런 개발을 하고 있지 안다가 그 지역에서 강제로 쫓겨난 이주민들이 환매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자, 그제서야 계획에 없던 통신학교를 비롯하여 몇 개의 군부대를 이전시키기 위해 가뭇에 콩나듯 시설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토지가 잡초만이 우거진 채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넓은 면적의 토지를 방치함은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당연히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9조2항과 토지수용법제 71조 2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환매조치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고도로 발달된 현대전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6대 도시내의 군부대는 외곽으로 이전시키게 되어 있어 대전시에는 군사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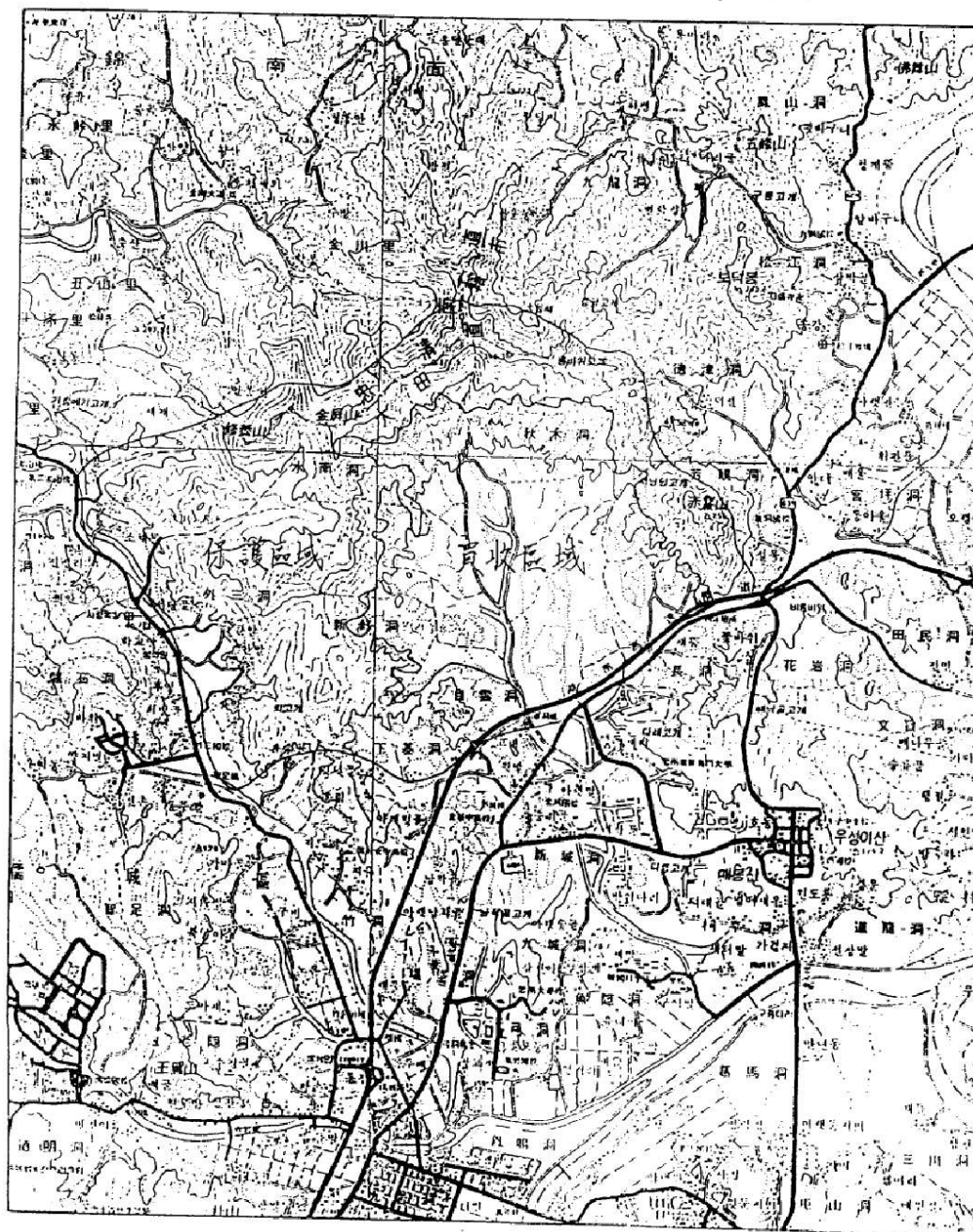
아니라, 자운지구는 최첨단 과학 연구 시설과 석학들이 총 집결한 대덕 연구 단지 인접지역으로서 유사시 적의 선제공격 대상이 되는 군사 시설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되는 지역임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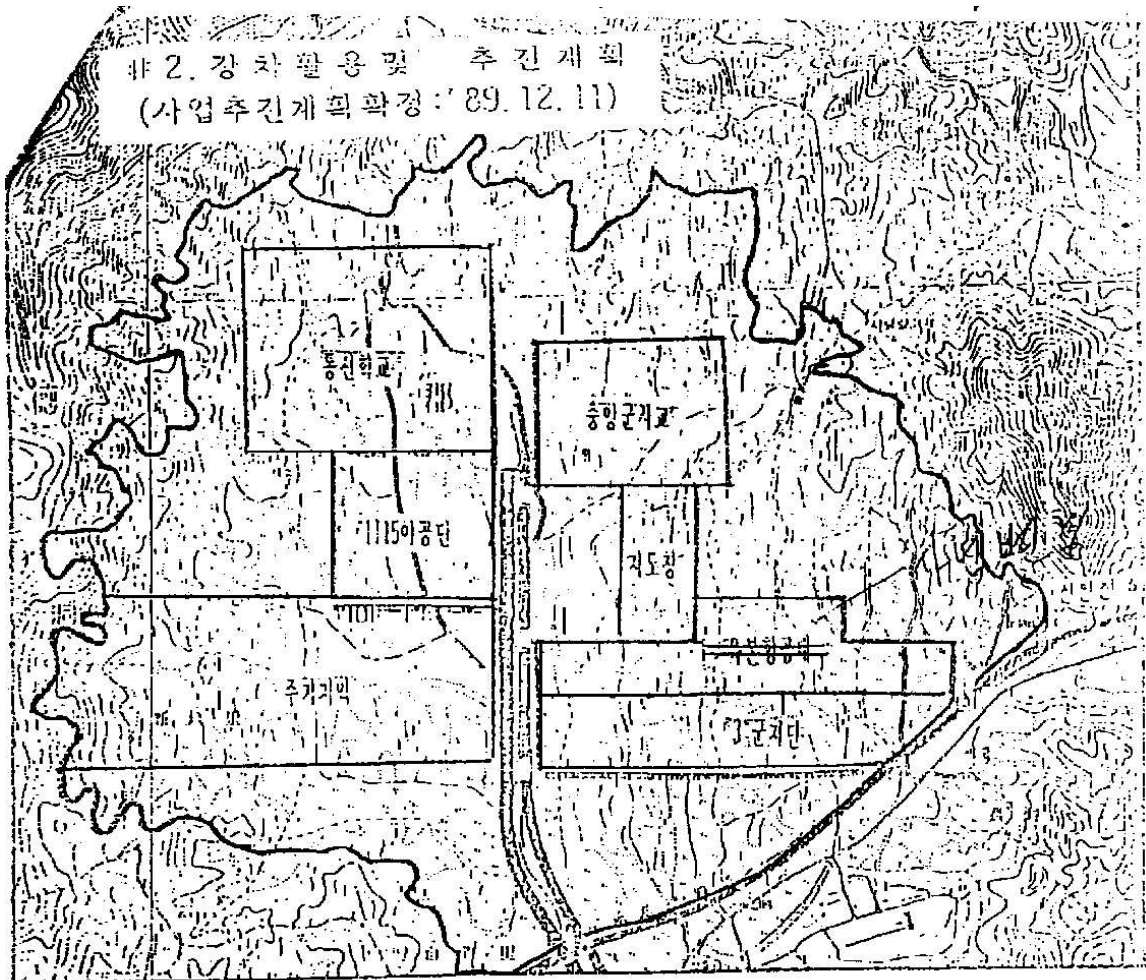
불구하고 군사 시설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110만 대전시민의 대변자인 대전직할시 의회에서 대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전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전시와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군사시설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 본회의에서 승인, 건의하여 군사시설 공사를 중단시키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시켜야 되겠기 긴급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圖 置 位





○ 추진 일 정

[illegible]